

EU Brief

| 월간 EU 동향 |

- 유럽 은행 부실이 경제회복의 걸림돌
Europe's struggling financial sector to remain the major obstacle for the recovery
- 아이슬란드의 EU 가입신청
Iceland's EU bid
- EU의 환경규제 강화
EU strengthens its environmental regulations
- EU 제조업은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의 근간
EU manufacturing sector continues to be vital
- 리스본조약과 EU의 법적 실체 변화
The Lisbon Treaty and reforming EU's legal institutions

 삼성경제연구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15번지
삼성생명 서초타워 28층

Phone: 3780-8306

Fax: 3780-8009

www.yonsei.org



EUROPEAN COMMISSION
External Relations



Yonsei-SERI EU Centre

	EU Economy 유럽 은행 부실이 경제회복의 걸림돌 Europe's struggling financial sector to remain the major obstacle for the region's economic recovery	002
	EU Politics 아이슬란드의 EU 가입신청 Iceland's EU bid	006
	Trade Issues EU의 환경규제 강화 EU strengthens its environmental regulations	011
	Industry Trends EU 제조업은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의 근간 EU manufacturing sector continues to be vital for employment and economic growth	014
	EU Law 리스본조약과 EU의 법적 실체 변화 The Lisbon Treaty and reforming EU's legal institutions	017
	Social Issues 경기침체로 인해 극우 민족주의와 인종차별이 기승 The rise of far-right nationalism and racism during the economic downturn	021
	Report Review 국제적 위상을 유지하기 위한 EU의 과제 EU's next challenges in maintaining its international stature	023
	유럽지역 경제회복을 위한 정부재정의 중요성 Urgency to rebalance the government budget in Europe	026
	위기 이후 세계경제: 유럽의 경제회복 여부가 관건 Europe in the post crisis global economy: will it lead or lag the world recovery?	027
	EU Centre news 제2회 국회 브뤼셀 포럼 The second Parliament Brussels Forum	028



유럽 은행 부실이 경제회복의 걸림돌

Europe's struggling financial sector to remain the major obstacle for the region's economic recovery.

The European Central Bank estimates that the potential write-downs of eurozone banks could reach around \$649 billion (or 4.5% of the banking sector's total assets) between 2007 and the end of 2010. The deleveraging effect could continue as it is most likely that an inadequate level of capitalisation and banking system's vulnerability will be revealed in the stress testing of the continent's banks, which are expected to be completed by September. If the tools to fix these problems prove to be ineffective, confidence in the system will not be restored any time soon and this will translate into further contraction in private lending. The ECB expects the region's private lending to return to normality and a sustainable economic growth rate by the second half of 2010.

유럽 은행의 부실이 미국보다 심각

유럽 은행의 손실 규모가 미국보다 클 것으로 추정된다. 유럽중앙은행(ECB)은 2007~2010년 유로 지역 은행들의 손실¹ 규모가 미국을 상회하는 총 6,490억 달러(은행 총자산의 4.5%)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다. 2009년 4월 국제통화기금(IMF)의 예측에서도 유럽 은행의 자본확충 필요액은 총 6,000억 달러로 미국(2,750억 달러)을 크게 상회²하고 있다. 유럽 은행의 손실 既상각액은 예상 손실액의 56%에 불과해 향후 손실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증권투자 손실 예상액(2,180억 달러) 중 既상각액은 2,150억 달러(상각률 99%), 대출손실 예상액(4,310억 달러) 중 既상각액은 1,500억 달러(상각률 35%)이며, 2009년 6월 현재 2,840억 달러의 추가 상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경제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신용경색 재연 가능성, 부실처리 대책 지연 등으로 부실규모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대출과 對유럽 증권투자 부문의 손실이

유럽 은행 부실의 주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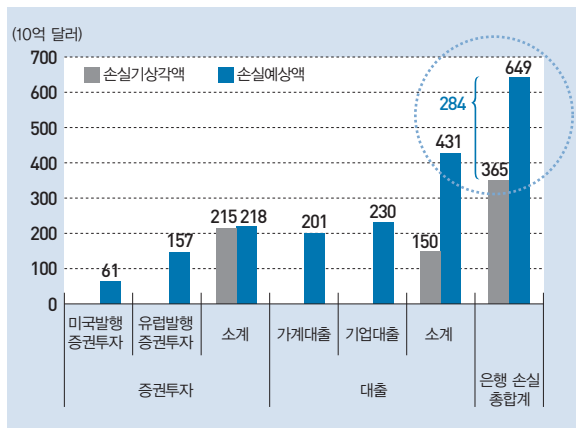
2007~2010년 대출손실 예상액은 증권투자 손실 예상액을 상회하고 있다. 대출손실 예상액은 4,310억

¹ 손실 = 자산평가 손실 + 기타 비경상 손실 + 대출손실

² 2008년 말 기준 자산규모가 1,000억 달러를 상회하는 19개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 결과 지난 5월 7일 미국 정부가 10개 대형 은행에 명령한 자본 확충 규모는 746억 달러에 그침

달러로 증권투자 손실 예상액(2,180억 달러)의 약 1.9배에 달하며, 부문별 손실 예상액은 기업대출(2,300억 달러)이 가계대출(2,010억 달러) 규모보다 크다. 한편 對유럽 증권투자 손실 예상액이 對美 증권투자 손실 예상액을 상회하여 유럽 내 금융부실의 심각성을 시사하고 있다. 증권투자 손실 예상액 중 對유럽 증권투자 손실 예상액은 1,570억 달러로 對美 증권투자 손실 예상액(610억 달러)의 약 2.5배에 달한다.

★ 2007~2010년 유로 지역 은행의 부문별 손실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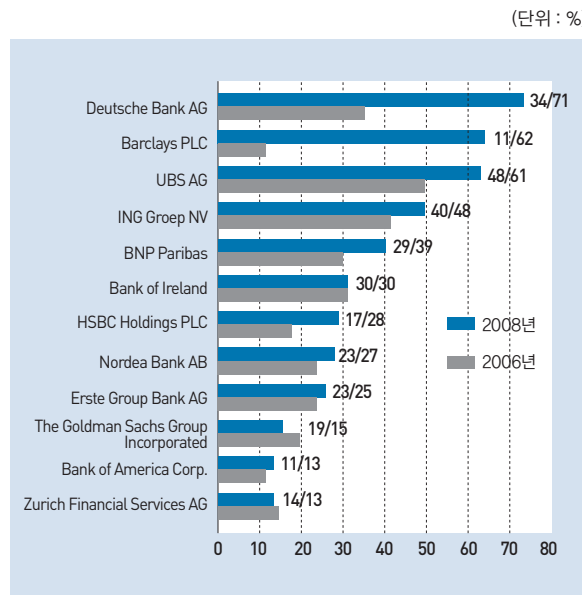
자료: ECB(2009. 6.) Financial Stability Review <http://www.ecb.europa.eu>

높은 레버리지 비율과 자본 적정성이 취약

유럽 은행들은 미국 은행들에 비해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편이다. 유럽계 은행의 경우 2008년 말 현재 바클레이즈가 62배, 도이치 은행이 71배, BNP 파리가 39배인 반면, 미국계 은행의 경우 골드만삭스가 15배, BOA가 13배이다.

★ 주요 은행별 레버리지 비율 현황(2006년과 2008년 비교)



주: 그래프 안의 수치는 2006년/2008년 레버리지 비율
자료: Thomson one Banker

2009년 1/4분기 유럽 은행들의 BIS 자기자본비율 단기 상승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앞둔 자본 확충 조치로 인한 일회성 효과로 평가된다. 자본 적정성 및 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BIS 자기자본비율은 2008년 6월 말 이후 자본 확충 조치로 8.5%(2008년)에서 9.8%(2009년 예측치)로 상승하였다.³ 핵심자본(Core Tier 1) 비율도 2008년 6.7%에서 2009년 7.8%로 상승하였고, 유럽의 9개 대형은행의 평균 자기자본비율은 2008년 6월 말 이후 자본 확충으로 2006년 7.7%에서 2008년 8.1%로, 그리고 2009년

³ 유럽 48개 은행을 대상으로 조사 Spick, M. (2009. 6. 11.). European Banks Strategy: Stress tests and normalised earnings. Deutsche Bank.

★ 유럽 은행 자기자본비율 추이 (단위: %)

	2006	2007	2008	2009 1/4
기본자본비율	8.3	7.6	8.5	9.8
핵심자본비율	6.8	6.3	6.7	7.8

주: 1) 유럽 48개 대형은행 기준, 기본자본비율 2009년 1/4분기는 예측치
2) 기본자본비율(Tier 1 Capital ratio)은 납입자본금, 이익잉여금 등 핵심이 되는 자본만 포함하며, 이를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눠 산출한 지표임
3) 핵심자본비율(Core Tier 1 Capital ratio)은 하이브리드채·우선주 등을 제외한 보통주 중심의 기본자본
자료: Thomson one Banker; Spick, M. (2009. 6. 11.), European Banks Strategy: Stress tests and normalised earnings, Deutsche Bank.

1/4분기에는 8.6%로 상승하였다.

건전성 개선은 신규 자본 확충보다는 부실 위험자산 매각과 같은 일회성 요인에 기인하며, 부실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유럽 은행들은 경기침체로 자본시장이 위축되어 주식발행을 통한 신규 자본 확충이 어려운 상황이며 자기자본 총액보다 규모가 큰 위험자산(비수익자산)⁴을 매각하여 자본적정성을 보완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독일, 아일랜드, 북유럽 은행들은 재무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다. 현지 언론⁵과 도이치 은행 분석⁶에서도 취약한 재무 건전성을 지적하고 있고, 독일 중앙은행 총재인 악셀 베버(Axel Weber)는 독일경제의 어두운 전망과 더불어 기업도 산 증가로 인한 금융위기를 경고한 바 있다.

동유럽 대출 부실로 서유럽 은행의 수익성 감소

동유럽발 금융 불안에 대한 노출 증가로 서유럽 은행들의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 또한 우려된다. 동유럽 은행에 대한 서유럽 은행들의 소유 지분 비율이 대부분 70%를 상회하고 있어 동유럽 부실로 서유럽 은행들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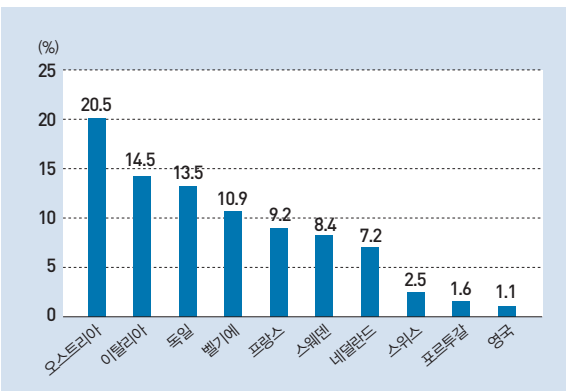
⁴ 도이치 은행, 크레디트 스위스, UBS 등 서유럽 대형은행들의 Level 3 자산(시장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운 위험자산) 규모가 3월 말 현재 총 2,300억 달러로 자기자본 총액을 모두 상회하는 상황

⁵ Brief-Most European banks would pass a 'stress test': Deutsche. (2009. 6. 12.). FinanzNachrichten. <http://www.finanznachrichten.de/>

⁶ Spick, M. (2009. 6. 11.). European Banks Strategy: Stress tests and normalised earnings, Deutsche Bank.



★ 최근 유럽계 은행의 동유럽에 대한 대출액 추이(GDP 대비)



주: 2008년 기준 동유럽 10개국에 대한 서유럽 국가별 대출 비중(전체 동유럽 10개국의 대출 규모=100%).
자료: BIS; 이종규 (2009), "동유럽 금융위기의 현황 및 전망"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특히 오스트리아계 은행의 피해가 우려되는데, 2009년 3월 현재 동유럽 대출 규모는 2,284억 달러로 오스트리아 GDP의 60%에 해당된다. 최근 S&P가 국가신용등급을 낮춘 발틱 3국에 대한 부실대출로 스웨덴계 및 노르웨이계 은행들의 2009년 2/4분기 손실이 급증하고 있다.

주식시장의 호조와 달리

시장지표들은 불확실성이 상존

미국의 주식시장 회복으로 유럽 주식시장도 동반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2009년 7월부터 미국과 유럽 주식시장 지수가 상승세를 회복하며 유럽 금융주와 제조업주 모두 회복세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이와 달리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시장지표도 상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 2009년 1/4분기 순자산비율(price-to-book value ratio: PBR)⁷은 2007년 시장 붕괴 이전 시기보다 3배 가량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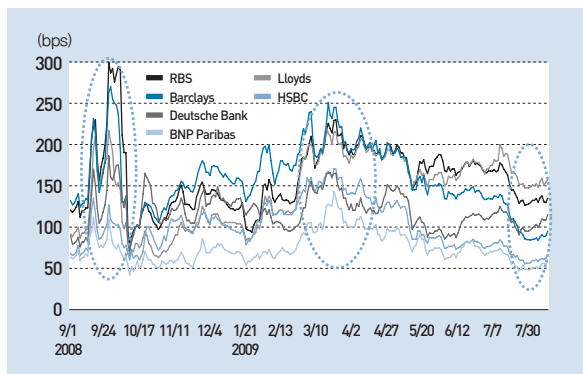
또한 2009년 상반기 기업부도 증가로 인한 부실채권 급증에 대비하여 유럽 은행들은 대손충당금을 두

⁷ 장부가치 대비 시장가치 비율

⁸ ECB (2009), Financial Stability Review.

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동유럽의 경제위기 가속화로 동유럽 대출이 많은 서유럽 은행들도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2009년 8월 들어 유럽 대형은행들의 CDS 프리미엄이 재상승하고 있다.

★ 유럽 주요 대형은행의 CDS 프리미엄(만기 5년물) 추이



자료: Thomson Reuters, Datastr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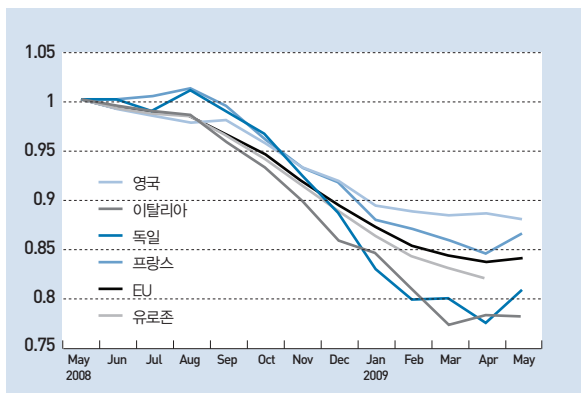
은행 부실은 경제 회복을 지연시킬 가능성

IMF는 향후 수분기 동안 대부분의 국가경제가 성장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글로벌 인사이트(Global Insight)도 2010년 1/4분기부터 세계경제 성장률이 전년 대비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 기관들의 전망 당시만 하더라도 EU 경제는 회복이 더딜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글로벌 인사이트에 따르면, EU 27개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2010년 2/4분기부터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ECB 역시 유럽 경제의 회복 시기를 2010년 하반기 이후로 전망하였다.⁸

하지만 2/4분기 들어 유로 지역의 경제는 경기침체가 빠른 속도로 완화되고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개선되고 있다. 이를 반영해 2009년 2/4분기에 산업생산 지수가 소폭 회복세로 돌아섰다. EU 27개국의 산업

생산지수는 2009년 6월 현재 2005년 산업생산의 88% 수준으로 반등하였고, 특히 프랑스와 독일의 산업생산지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이렇게 유로 지역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된 것은 신차 구입보조금(Cash for Clunkers) 제도⁹ 등 각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중국 등 아시아 신흥국의 수입수요가 회복된 데에 기인한다.

★ 유럽 산업생산지수 변화(2005=1)



자료: OECD

유로 지역 경제는 3/4분기에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선 후 2010년까지 이러한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여러 장애물로 인해 1% 내외의 낮은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 증가와 역자산 효과, 은행대출 위축 등이 경기회복의 장애물이다. 경기회복이 지연된다면 부동산대출 부실과 기업부도 증가 등으로 유럽 금융기관들의 부실 채권이 증가해 금융시장 불안은 재현될 수 있다. 만약 9월 말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나타난 유럽 금융기관들의 부실문제

⁹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루마니아 등이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신차구입보조금 제도에 힘입어 민간소비가 증가하였다. 특히 독일의 경우 경기부양책(총 500억 유로)의 일환으로 50억 유로의 신차구입보조금 제도(신차 구입 시 2,500유로 지원)를 8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해 약 200만 대의 중고차 교체 효과를 거두었다.

를 서둘러 정리하지 않을 경우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은행들의 디레버리징(de-leveraging) 현상이 장기화되어 민간대출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은행의 민간대출과 유로 지역의 경제성장률 간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은행부실이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는 셈이다. 이 때문에 경제 전문가들은 은행의 민간대출이 정상화되는 2010년 하반기 이후에 비로소 유로 지역 경제가 지속가능하고 견고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양오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아이슬란드의 EU 가입신청

Iceland's EU bid

Icelandic members of parliaments voted in favour of joining the EU, on the 16th of July, by a narrow margin- 33 votes to 28 with 2 abstentions. The Icelandic foreign minister officially applied for membership to his Swedish counterpart as Sweden currently holds the Presidency of the EU Council. The domestic political situation and country's sentiment that was hostile to Iceland's bid turned around in the aftermath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when it faced the possibility of a sovereign default. This is just the beginning of a long process as its accession now requires an approval by the EU and then Iceland's people will be asked to vote in a referendum.

1952년 6개 회원국으로 이루어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에서 출발한 EU는 현재 27개의 회원국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의 지역 블록으로 성장하였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를 EU 회원국으로 받아들인 2007년 이후에도 EU의 확대는 멈추지 않았고, 터키(1999), 크로아티아(2003), 마케도니아(2004)가 EU 가입 후보국으로 EU의 가입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었다. 여기에 또 하나의 EU 가입 후보국이 2009년 7월에 등장하였다.

지난 7월 16일 아이슬란드 의회는 아이슬란드의 EU 가입 신청안을 찬성 33표, 반대 28표, 기권 2표로 근소한 표 차이로 통과시켰다. 이어 7월 23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아이슬란드 외무부장관은 EU의 장국인 스웨덴의 외무부장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아이슬란드의 EU 가입을 신청하였다. EU 측에서는 7월 27일 각료이사회를 개최하여 아이슬란드의 EU 가입 신청을 승인하였다. 현재 EU 각료이사회 의 권고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아이슬란드의 EU 가입협상 개시와 관련한 절차를 준비 중이다.

아이슬란드 내부의 정치적 변화

아이슬란드 정부가 처음부터 EU 가입에 적극적이지는 않았다. 1995년부터 2007년까지 집권했던 독립당과 진보당의 우파 연립정권은 당시 아이슬란드의

EU 가입에 반대하였다. 당시 Geir Haarde 총리는 EU 가입과 유로화 채택이 아이슬란드의 이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줄기차게 주장하였다.

반면, 당시 좌파 야당이었던 사회민주당은 아이슬란드의 EU 가입에 찬성하였다. 2007년 5월 총선 결과에 따라, 과반수 확보에 실패한 독립당은 좌파 사회민주당과 좌우 동거정부를 구성하였다. 좌우연정은 EU 가입신청을 위한 정책을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이 시기에 아이슬란드 정부는 아이슬란드의 통화가 갖는 제약성 때문에 아이슬란드가 EU에 가입하지 않고 유로화를 채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이에 대해 EU는 아이슬란드가 EU 회원국 지위를 획득하지 않고서는 유럽통화동맹(EMU) 체제에 가입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U 가입에 비교적 소극적이었던 아이슬란드의 정치상황은 아이슬란드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고조되던 2008년 9월 이후 파산위기에 직면하면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2009년 총선에서 EU 가입에 부정적이었던 진보당은 아이슬란드가 자국의 수산 및 천연 자원의 독점적인 지위를 갖는 것을 요구하는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EU 가입 지지로 당의 방침을 선회하였다. 반면에 독립당은 교육부 장관이었던 Gunnarsdottir 등 독립당 출신 일부 정치인이 EU 가입 논의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지만, 당의 공식 입장으로는 EU 가입 문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였고, 가입협상 이전에 EU 가입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주장하였다. 좌파 사회민주당은 EU 가입을 주요 공약으로 삼았다.

★ 아이슬란드 2009년 4월 선거결과

정당명	득표(%)	의석 수	의석 증감	EU 가입
사회민주당	29.8	20	+2	찬성
독립당	23.7	16	-9	반대
좌파녹색운동	21.7	14	+5	반대
진보당	14.8	9	+2	찬성
시민운동	7.2	4	+4	찬성
자유당	2.2	0	-4	반대
민주운동	0.6	0	-	-
합계	100.0	63	-	-

자료: Ice News

2009년 4월 선거결과 사회민주당이 승리하여 좌파 녹색운동과 연정을 구성하였다. 사회민주당 출신으로 총리가 된 Siguroardottir는 즉각적인 EU 가입신청과 국가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4년 이내에 유로화를 채택할 것을 주장하였다. 결국 아이슬란드 정부는 EU 가입안을 5월 25일 의회에 제출하였고, 7월 16일 표결에 부쳐져서 통과되었다.

아이슬란드 금융위기와 EU 가입 논의

아이슬란드에서 EU 가입에 부정적이었던 우파 독립당이 여당의 지위에서 물러나고, EU 가입에 긍정적인 좌파 사회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우파정당인 진보당이 EU 가입 지지로 당의 입장을 바꾸게 된 주요 원인은 2008년 아이슬란드에 불어닥친 경제위기 때문이었다.

1990년대까지 아이슬란드는 전통적으로 산업에서 어업의 비중이 큰 국가였다. 아이슬란드의 다른 산업의 축은 알루미늄 제련이었다. 이는 아이슬란드가 화산섬이었기에 풍부한 지열과 수력을 통해 낮은 단가로 전력생산이 가능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전력소모가 많

은 알루미늄 제련업을 발전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아이슬란드의 산업환경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변화를 맞이하였다. 1991년 아이슬란드 정부는 어업과 알루미늄 제련업에서 발생한 자금의 활용방안을 고심하다가, 외환규제 완화 및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정책 등 금융시장 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아이슬란드의 금융시장을 육성시켰다. 이를 통해 아이슬란드는 유럽의 금융허브로 성장하게 되었다.

당시 아이슬란드 금융산업의 빠른 성장속도를 살펴보면, 1994년 금융산업이 아이슬란드 총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였으나, 2007년에는 GDP 대비 11%로 성장하였다. 금융위기 이후 국유화된 3개 은행인 카우프싱, 란즈방키, 글리트니르 은행의 주가총액이 아이슬란드 총 주가총액의 5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아이슬란드의 금융업은 아이슬란드의 경제에 파급효과가 컸다.

★ 아이슬란드의 주요 경제지표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경제성장률(%)	2.4	7.7	7.5	4.5	5.5	0.3
1인당 GDP(\$)	37,779	45,156	54,368	54,238	64,959	55,462
수출(십억\$)	2.38	2.89	3.10	3.48	4.78	4.91
수입(십억\$)	2.59	3.41	4.58	5.72	6.15	4.97
무역수지(십억\$)	-0.21	-0.52	-1.48	-2.24	-1.37	-0.06
재정수지 (GDP 대비 %)	-2.8	0	4.9	6.3	5.2	-1.2
경상수지 (GDP 대비%)	-4.8	-9.8	-16.1	-25.3	-15.4	-34.7

자료: Global Insight; IMF, World Economic Outl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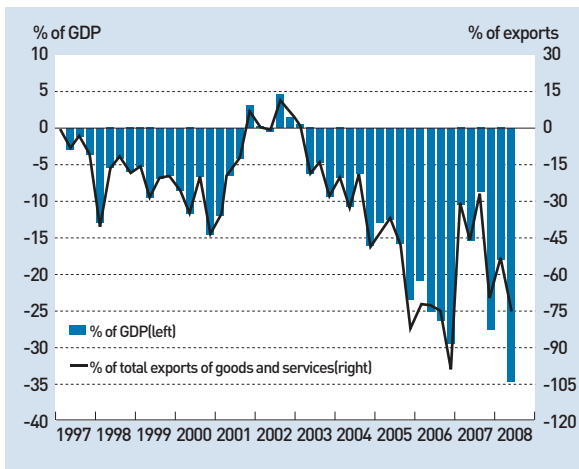
아이슬란드가 빠른 시간에 금융허브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아이슬란드 정부가 금융 규제를 풀면서 동시에 고금리 정책을 폈고, 유럽 대륙의 많은 나라들이 높은 이자율을 찾아 아이슬란드로 자금이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금유입을 바탕으로 아이슬란드는 2007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6만 6,000달러로 세계 3위를 차지하였고 2007년 유엔



조사결과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선정되기도 했다.

문제는 아이슬란드의 금융업을 발전시킨 자금의 대부분이 고금리를 노린 외화차입금이었다는 데 있다. 그 결과 대외부채가 국내총생산(GDP)보다 5.647배 많았고 단기외채가 외환보유고의 15.63배에 달했다. 더 큰 문제는 아이슬란드 정부가 엄청난 규모의 경상수지 적자를 방치하였다는 것이다. 경상수지를 구성하는 무역수지, 서비스 수지, 소득수지 등이 모두 적자를 기록하였고, 이 규모는 해를 거듭할수록 확대되었다. 2003년 GDP 대비 4.8% 적자에 불과하던 것이 2006년에는 25.0%까지 확대되었고, 2007년에는 조금 감소하였지만 그 규모는 GDP 대비 15.5%에 달하였다.

★ 아이슬란드의 경상수지 적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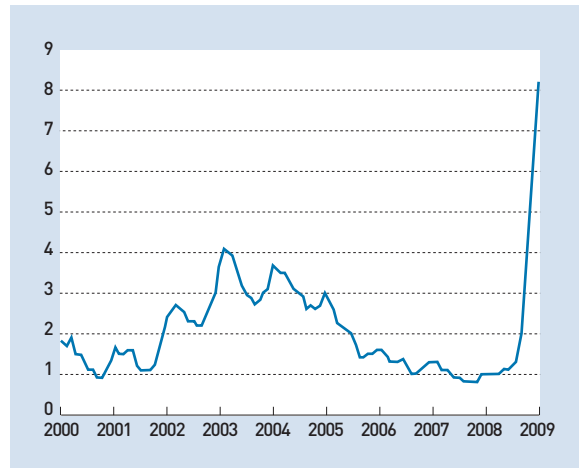
자료: 아이슬란드 중앙은행 (2008); KIEP (2008). “지역경제포커스”.

결국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 금융시장이 경색되자 아이슬란드 은행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무디스 등의 신용평가 기관이 아이슬란드 은행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고, 외국의 금융기관은 아이슬란드 은행을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결국 외국의 금융기관은 아이슬란드 은행에 대한 대부를 거

부하였고, 아이슬란드 은행이 외채를 상환할 수 없게 되자 아이슬란드 경제는 파국을 맞았다.

먼저 실업률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2008년 9월 파산위기 직후인 2008년 10월 불과 1.9%에 불과하던 아이슬란드의 실업률은 같은 해 11월에 3.3%, 다음 해인 2009년 2월에는 8.2%까지 증가하였다.

★ 아이슬란드 실업률 변화



자료: Statistics Iceland

아이슬란드의 경제적인 파국과 이에 따른 아이슬란드 크로나의 급격한 가치 하락은 아이슬란드 내에서 EU 가입과 유로화 도입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2008년 10월 노조는 임금동결의 대가로 아이슬란드의 EU 가입신청을 요청하였다. 당의 공식 정책으로는 EU 가입을 반대한 독립당의 일부 정치인이 당의 입장과 반대로 EU 가입신청을 지지하였고, 진보당은 기존의 당의 방침을 수정하여 EU 가입 지지로 선회하였다.

EU 가입을 지지하는 여론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2006년 2월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35%만이 아이슬란드의 EU 가입에 찬성했으나 2008년 10월에는 응답자의 70%가 아이슬란드의

EU 가입에 찬성하였다.

마침내 2009년 4월 선거에서 아이슬란드의 EU 가입을 꾸준히 요구해온 사회민주연합이 승리하여 아이슬란드 의회에서 원내 제1당이 되었고, 2009년 7월 EU에 공식으로 가입신청을 제출하였다.

아이슬란드의 EU 가입관련 유리한 점

아이슬란드는 터키,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등의 기존 후보국에 비해 유럽경제지역 (EEA-European Economic Area)의 회원국이라는 점 등 EU 가입절차상의 많은 유리한 점을 지니고 있다.

유럽자유무역연합(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의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는 1992년 5월 2일에 EU와 EEA 협정에 조인하였다. 1994년 1월 1일부로 발효된 EEA 협정에 따라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는 EU에 가입하지 않고도 농업과 어업 부문을 제외한 유럽 단일시장에 참여하여, 상품-노동력-서비스-자본 이동의 자유를 보장받았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는 EU 법률의 상당 부분을 국내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EU 확장위원회의 위원장 올리 레hn(Olli Rehn)은 아이슬란드가 EU 법률의 3분의 2 정도를 이미 적용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이미 아이슬란드가 EU 회원국이 되기 위한 조건 중 많은 부분을 충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2000년부터 아이슬란드는 EEA 차원의 경제적인 교류관계를 뛰어넘어 EU 역외국경을 공동 관할하기 위한 「셴겐협약(Schengen agreement)」에도 준회원국으로 가입하여 EU국가와 사법 및 내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향후 아이슬란드가 EU에 가입하기 위한 EU 측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아이슬란드 EU 가입의 걸림돌

그러나 아이슬란드의 EU 가입에 전혀 걸림돌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EU의 어업정책이다. EU 어업정책은 EU 회원국민에게 동등하게 회원국 영해에서 어업권을 보장하고 있다. 현재의 정책이 아이슬란드의 EU 가입에 적용되면, 아이슬란드 영해에서 어업권을 다른 EU 회원국이 동일한 권리를 누리게 된다. EU 회원국에 대한 아이슬란드 수역 개방 문제는 경제에서 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아이슬란드에서 국민들의 EU 가입에 대한 반발을 크게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며 이는 아이슬란드의 EU 가입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실제로 아이슬란드는 영국과 1958년, 1972년, 1976년에 걸쳐서 대구전쟁(Cod War-당시 냉전 상황에서 대구를 뜻하는 Cod를 가지고 만들어낸 단어)이라고 불리는 심한 어업분쟁을 경험하였다. 3차례에 걸친 어업분쟁의 원인은 아이슬란드가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국의 영해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영국과 충돌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교전행위와 일시적인 국교단절까지 경험하였다.

아이슬란드의 EU 가입에 또 다른 걸림돌은 아이슬란드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경제위기 상황이다. 아이슬란드의 재정적자는 GDP 대비 13%에 이르고 있고, 공공부채의 경우 GDP의 100%에 이르고 있다. 현재 아이슬란드 국민은 1인당 32만 달러(약 4억 원)의 빚을 안고 있다. 아이슬란드 통화인 크로나의 유로화 대비 현재가치는 2008년 1월 가치와 비교해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게다가 아이슬란드의 신용등급은 현재 정크본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슬란드는 유로화 가입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다. 이 때문에 몇몇 독일정치인들은 아이슬란드가 경제 문제를 해결한 후 EU에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아이슬란드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선 EU 회원국과의 협조가 절실하다. 지난 8월 29일 아이슬란드 의회는 아이슬란드의 은행 계좌에 돈을 넣었다가 손해를 본 영국과 네덜란드에게 57억 달러에 이르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아이슬란드는 영국에 26억 유로, 네덜란드에 12억 유로에 달



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이며, 이는 2008년 아이슬란드의 은행 시스템의 붕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영국과 네덜란드의 예금자의 손실을 변상하는 데 쓰이게 된다. 이처럼 최근 나타나고 있는 아이슬란드의 EU와의 협조적인 행보는 협상을 진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이슬란드가 EU 가입에 직면한 또 다른 문제는 아이슬란드 정부와 EU의 가입협상 타결 이후 아이슬란드에서 이를 국민투표로 비준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아이슬란드의 경제적 파국이 첨예화되었던 2008년 10월에 아이슬란드 국민의 70%가 아이슬란드의 EU 가입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2009년 7월경에 아이슬란드 국민의 EU 가입 지지도는 38%로 떨어졌다. 그 이유는 아이슬란드 국민의 상당수가 EEA에서 이미 채택된 EU 규정을 아이슬란드 경제 위기를 일으킨 요인의 하나로 보고 있다는 점이며, 더 중요한 문제는 아이슬란드 국민의 대다수가 EU의 농업 정책에 혐오감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야당인 독립당의 입장에서 볼 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EU 가입 정책에 대한 비판은 가장 쉽게 반정부 여론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투표에 의한 비준 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다.

아이슬란드의 이웃나라 노르웨이는 EU 가입협상을 두 번이나 했지만, 번번이 국민투표에서 거부당했다. 아이슬란드가 이웃 노르웨이의 전철을 밟을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안상욱 한서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EU의 환경규제 강화

EU strengthens its environmental regulations

One of the most pronounced changes in recent trade protectionism is a rise of green protectionism. The EU leads the way on green issues and it is strengthening the environmental regulations, which are being applied to the firms in the member and non-member countries on equal terms. It is important to see this change not just as a strengthening of the protectionism but rather as an opportunity to develop a green industry that can become the next growth engine, and respond with an active strategy in this sector.

우회적 형태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고용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보호주의 조치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내수시장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 점을 고려한다면 경기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 형태로 보면 기존의 전통적인 보호주의와는 다른 모습일 가능성이 높다. 즉 관세율 인상이나 비관세장벽 구축 등 전통적인 보호주의 조치보다도 보조금 및 구제금융 지원 시 국내 기업에 대한 차별 대우 등 우회적인 형태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선진국 정부가 위기에 처한 금융 산업을 지원하면서 그 조건으로 자국 금융기관 및 기업에만 대출하도록 유도하는 금융보호주의, 노동 및 환경 규제와 연계된 간접적인 방식의 수입규제 등이 그 대표적인 형태라 할 수 있겠다.

그중에서 가장 큰 특징은 환경규제를 필두로 한 녹색보호주의의 장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녹색보호주의란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정책을 표면적 이유로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외국기업의 자국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한편 자국기업의 환경 관련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는 조치를 말한다.¹ 최근 일부 선

진국들이 추진 중인 탄소관세(Carbon Tariff)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자국의 환경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외국기업 차별조치 또는 자국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재정지원 조치도 이에 포함된다.

EU를 필두로 한 녹색시장 창출과 환경규제의 강화

EU는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정책에 있어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있다. EU는 이미 강력한 환경규제와 법 제정을 통해 녹색시장을 창출하면서 시장주도권을 장악해왔다. 온실가스 규제와 같은 환경규제를 통해 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외국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미 2005년부터 EU 배출권 거래제(EU-ETS)²를 실시 중이며, 2007년 EU 의회는 자동차 CO2 배출량을 140g/km (2008년)에서 125g/km (2015년 이후)로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에너지 효율이 낮은 가전 제품 판매를 금지했으며, 제품의 원료 조달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평가하는 ‘전 주기 평가제도(Life-Cycle Assessment)’ 관련 입법도 추진 중이다. 특히 EU 내에서 뿐만 아니라 각종 환경규제들을 제3국에 적용하려는 시도도 늘어

¹ 기획재정부 (2009), “Green Protectionism(녹색보호주의) 동향 및 시사점”.
² EU 27개국이 교토의정서 준수를 위해 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총량제한 배출권 할당방식(Cap and Trade)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날 전망이다.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환경규제가 낮은 국가의 제품에 탄소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EU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그와 함께 정책지원도 가속화되고 있다. 2007년 EU 공동 기술개발 관련 「신재생 에너지법」을 기반으로 현재 제7차 ‘Framework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또한 수소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청정·재생 에너지 관련 R&D 확대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자국의 친환경 생산 기업에 대출보증 및 이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프랑스는 녹색산업에 투자하는 자국 기업에 대출이자 인하조치를 도입하기도 했다. 독일 역시도 녹색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 제정과 더불어 자국시장 확대정책을 펼치고 있다. 2000년 「재생가능에너지법」을 제정해 10년 간격으로 신재생 에너지 시장 확대 목표량을 제시하고 2004년부터 FIT(Feed-in-Tariff)를 통해 국내시장을 확대했다. 그 결실로 2004년 이후 독일의 신재생 에너지 시장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2005년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 일본을 추월하기도 했다.

EU의 녹색보호주의에 대한 한국기업의 대응은 미흡

이와 같이 EU는 외국기업에 대한 환경규제, 자국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재정 지원 등으로 녹색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그에 반해 한국기업들의 대응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8년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6%에 불과했다. 1995~2005년 EU 27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평균 3.2% 감소한 반면, 한국은 103.3%나 늘어 상황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³ 특히 제품원료 확보, 생산, 유통, 폐기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제품에 표기하도록 하는 ‘탄소발자국 제도’ 등 EU의 엄격한 환경규제에 제대로 대응을 못한다면 수출품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수출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EU의 엄격한 환경기준을 맞추었다 하더라도 개별 국가마다 다른 환경규제를 몰라서 큰 손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한다. 영국, 독일, 덴마크, 이탈리아 등 일부 회원국들은 EU 법보다도 높은 수준의 환경규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한 완구 수출기업은 화학첨가물질 프탈레이트 사용을 0.1%까지 허용한 EU 기준에 맞춰 생산을 하여 덴마크에 수출을 하려 했으나, ‘수입불허’ 통보를 받았다. 덴마크는 완구류에 한해 프탈레이트를 0.05%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는 별도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반도체 기업도 EU 기준에 맞춰 포장재를 제작했지만 이탈리아 기준을 초과하여 포장재를 다시 제작해야 했다.⁴ EU의 환경규제는 각료이사회 지침, 집행위원회 지침, 규칙, 각국 개별 규제까지 4종류로 구성돼 있는 다층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결국 EU 차원의 규칙을 다 지켰더라도 각국별 규제를 모르면 수출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녹색보호주의에 대한 발상의 전환 필요

EU는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하여 환경 관련 이슈를 선도하고 있다. 그런 만큼 EU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환경규제를 실시하는 지역으로 꼽힌다. 또한 EU가 탄소관세 부과 등을 통해 신흥국들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면 양측 간의 보호무역주의 논쟁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국 입장에서 對 EU 수출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EU는 타국의 기업뿐 아니라 회원국 기업들에게도 높은 환경 기준을 동일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자국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 장벽이라고 비난만 하기에는 분명 무리가 따른다. 심지어 이러한 환경규

제 강화는 EU 산업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자국 업계의 반발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높아진 EU의 환경기준을 단순한 규제나 의무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녹색산업이 미래의 성장 산업이라는 적극적인 관점에서 인식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이 녹색산업을 신성장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경우 기술적 측면에서 성공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밝혀졌다.⁵ 이러한 기술적 측면의 강점을 법과 제도 등 인프라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CO₂ 감축목표 설정, 배출권 거래소 신설, 녹색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산업단지 육성 등 법·제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종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³ 강희찬 (2009. 8. 24.), “녹색보호주의 대비 시급하다”, 『서울경제신문』.

⁴ “EU 환경규정만 믿다가…… 국가별 수입규제에 낭패”. (2009. 8. 3.), 『한국경제신문』.

⁵ 이지훈 외 (2009), “녹색성장시대의 도래” (CEO Information 제675호), 삼성경제연구소.





EU 제조업은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의 근간

EU manufacturing sector continues to be vital for employment and economic growth.

Despite the EU employment rate in its manufacturing sector declined by 0.9% per annum between 2000 and 2008, the productivity improved by 1.3% per annum during the same period. The size of its services sector is expanding yet the manufacturing sector carries on playing a crucial role in the EU job market and it is responsible for 20 to 30% of the total value added in the region. As a result of the economic integration, the level of specialisation is intensifying with Germany specialising in machines and transportation facilities, Ireland in chemicals, Finland in electro-optics, Slovakia in metals, and Italy and Portugal in leather products. With a further production specialisation within the region expected, the member countries will have to build a flexible economic structure that will enable them to cushion the effects of external shocks.

EU 제조업은 총 부가가치의 30%를 차지

27개 EU 회원국들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산업을 한두 개씩은 보유하고 있다. EU가 제조업 강국인 이유다. 특히 EU와 회원국 정부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U 제조업은 2006년 기준으로 6.8조 유로의 매출, 1.7조 유로의 부가가치, 3,40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¹ 제조업의 1인당 부가가치 창출액은 4만 9,700유로에 이른다. 제조업은 금융산업을 제외한 경제(non-financial business economy)에서 고용의 27%, 부가가치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의 고용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부가가치 비중에 비해 낮은 이유는 제조업의 노동 생산성이 비금융 비즈니스 경제의 전체 평균보다 높기 때문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2004년과 2007년에 EU에 가입한 신규 회원국들의 고용비용은 부가가치를 상회하고 있다.(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베니아 제외)

EU 27개국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제조업 비중은 국가마다 20~40%로 큰 차이를 보인다. 키프로스(16%), 룩셈부르크(19%), 노르웨이(16%)는 10%대로 비중이 낮지만, 헝가리와 슬로베니아는 각각 41%로 비중이 매우 높다.

¹ 구조적 기업 통계(Structural Business Statistics:SBS)는 EU 차원에서 제조업, 건설, 서비스(금융서비스 제외) 등 세부 산업별 경제활동 현황을 집계하여 유럽통계청(Eurostat)에서 발표하는 자료임.

금속 및 금속가공 산업이 최대 고용산업

우선, 제조업에 속해 있는 하부산업들의 고용 및 노동 생산성을 살펴보자. 제조업 중 가장 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산업은 금속 및 금속가공업(508만 명)이며, 그 다음은 식품, 음료, 담배 제조업(470만 명)이다. 전기 및 광학기계(370만 명), 기계장비(365만 명), 운송장비(315만 명) 등도 고용 인력이 많은 편에 속한다. 한편 노동생산성이 가장 높은 산업은 일반 예상과는 달리 석탄, 석유정제, 핵연료 제조업(1인당 22.7만 유로)이며, 반대로 노동생산성이 가장 낮은 산업은 섬유 및 섬유제품, 가죽 및 가죽제품 제조업(두 산업 모두 1인당 2.1만 유로)이다.

제조업 생산량은 2000~2008년에 연평균 1.3% 증가한 반면, 고용은 매년 0.9% 감소하였다. 2000~2008년에 독일(0.5%), 프랑스(1.6%), 영국(4%) 등 3대 경제대국에서 제조업의 고용 비율이 하락하였다. 이는 기업들이 신규 고용 대신 설비투자를 통해 생산성을 높인 데 기인한다. 기계와 부품, 화학, 운송장비는 매년 2% 이상의 고용 증가세를 기록한 반면, 가죽 및 직물, 섬유는 빠른 감소세를 보였다.

고용 비율을 보면, 플라스틱, 금속, 운송장비 부문에서만 소폭 증가했고 섬유, 가죽 분야는 오히려 고용이 크게 감소하였다. 직물, 섬유산업에서 가장 큰 고용 감소를 기록한 국가는 몰타, 헝가리, 체코, 키프로스이다.

경제통합으로 역내 산업특화가 가시화

그동안 학자들 사이에는 경제통합이 EU 산업의 지역적 특화를 진전시킬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왔다. 산업특화(Specialization)란 특정 국가가 소수의 산업이나 분야에 전문화하는 것을 의미하고, 산업집중(Concentration)이란 특정 산업이 EU 내 몇몇 국가에 모여 있음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국제무역이론에 따르면, 특정 국가의 산업구조는 기술(리카르도)과 요소, 부존량(헤셔-오린)에 따라 특화된다. 하지만 헤셔-오린 이론에 따르면 경제통합으로 요소 부존량의 차이가 감소함에 따라 회원국들은 유사한 산업구조를 갖게 된다. 반면 최근 등장한 새로운 경제지리모형²은 완전히 동질적이라 하더라도 규모의 경제와 무역비용의 상호작용에 의해 회원국들은 서로 다른 산업구조를 갖게 된다고 주장한다. 경제통합이 심화될수록 회원국들은 특정산업에 특화된다는 것이다.

독일은 EU의 최대 제조업 국가이다. 2006년 기준으로 회원국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인 4,490억 유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다. 독일은 14개 분야 중 가죽 및 섬유제품과 석탄, 석유정제, 핵연료 제조업을 제외한 11개 분야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반면 이탈리아는 직물, 섬유 및 가죽에서, 스페인은 석탄, 석유정제, 핵연료 분야에서 규모가 크다.

한편, 해당 산업의 규모와 무관하게 특정 산업에 가장 특화된 국가를 분석해보면, EU의 제조업이 경제통합의 진전으로 점차 지역별 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가가치에서 제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헝가리, 슬로베니아, 핀란드이다. 이는 이들 세 나라가 제조업에 가장 특화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특정산업의 특화는 역사적 전통과 자연 혹은 인위적 환경, 자원 확보 여부 등에 의해 좌우된다.

독일은 기계 및 운송장비에서 가장 특화되어 있는

² 새로운 경제지리모형은 정태적 경제지리모형과 경제성장 및 산업의 지리적 재배분을 함께 분석하는 동태적 경제지리모형으로 나눌 수 있다.

반면, 아일랜드는 화학제품, 불가리아와 헝가리는 석탄, 석유정제제품, 핵연료에서 특화되어 있다. 또한 루마니아, 이탈리아, 포르투갈은 다른 국가들보다 가죽제품 분야에 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회원국별 산업특화 현황(2006년, 부가가치 기준)

구분	제1 특화국		제2 특화국		제3 특화국	
	국가	산업 비중(%)	국가	산업 비중(%)	국가	산업 비중(%)
제조업 전체	헝가리	40.9	슬로베니아	40.8	핀란드	40.3
식음료 담배	아일랜드	7.0	폴란드	5.9	불가리아	5.7
섬유	불가리아	4.4	루마니아	3.5	포르투갈	3.1
가죽	루마니아	1.0	이탈리아	0.9	포르투갈	-
목재	라트비아	3.8	에스토니아	3.7	리투아니아	2.1
펄프 제지	핀란드	6.4	아일랜드	5.4	스웨덴	3.8
석탄, 석유정제	불가리아	-	헝가리	2.8	그리스	1.5
고무 플라스틱	룩셈부르크	3.2	체코	2.7	슬로베니아	2.6
화학	아일랜드	12.8	벨기에	7.5	슬로베니아	6.0
금속	슬로바키아	9.0	슬로베니아	7.5	체코	6.7
기계 장비	독일	6.1	이탈리아	4.9	핀란드	4.7
전기 광학	핀란드	9.7	헝가리	9.1	아일랜드	9.0
운송 장비	독일	6.8	체코	5.9	헝가리	5.6

자료 : Eurostat

대부분의 제조업은 대기업이 주도

EU 제조업은 대기업이 주도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종업원 250명 이상의 대기업이 EU 27개국의 제조업 부가가치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석탄, 석유정제, 핵연료 제조분야는 물론 수송장비 분야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반면 목재업은 중소기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05년과 2006년 통계를 살펴보면, 외국인 소유 기업이 제조업에서 높은 부가가치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적인 예로, 2005년 프랑스에서는 외국인 소유 기업이 제조업 부가가치의 32%를 창출했다.

대기업의 제조업 주도 현상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모든 EU 국가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2006년 통계에 따르면, 26개 회원국들 중



리스본조약과 EU의 법적 실체 변화

The Lisbon Treaty and reforming EU's legal institutions.

Ireland will hold a new referendum on the 2nd of October to get the EU's Lisbon treaty ratified. If the voters give their backing, the EU will become a federal-like regional union with a legal institution. The creation process of the European Community and the European Union can be viewed as an attempt to integrate the region through law and it is a gigantic political experiment.

정치통합의 이정표가 될 리스본조약

현재 EU의 최대 정치적 관심사는 ‘리스본조약’의 비준이다. 리스본조약은 지난 2007년 10월 리스본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최종 합의하고, 그해 12월 공식 서명하였다. EU가 진정한 정치공동체로 가는 중요한 고비인 ‘리스본조약’의 발효를 위해서는 EU 27개 회원국의 비준이 필요하다. 하지만 2005년에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반대한데 이어 2008년 6월에는 아일랜드가 국민투표에서 부결시킴으로써 두 번의 좌절을 맞보았다.

오는 10월 2일에 아일랜드는 다시금 리스본조약 비준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지난 6월 5일 아일랜드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342명 중 54% 이상이 리스본조약에 대해 호의적이었다. 또한 리스본조약이 발효되면 세금이 증가하고 규제가 강화될 것을 우려해 조약 비준에 반대해온 기업인들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강력하고 효율적인 EU 정부와 단일시장에 대한 열망으로 리스본조약의 홍보활동을 위한 기부금을 내고 있다. 이렇듯 리스본조약의 비준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정치통합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리스본조약은 EU 통합에 있어 어떠한 의미를 지닐까? EU는 2004년 6월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유럽헌법조약에 합의하였다. 하지만 일부 회원국의 반발에 부딪혀 EU에 초국가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한 국가와 국기, 공휴일 등의 규정을 삭제하였다. 그 결과 당초의 유럽헌법조약보다 완화된 형태의 리스본조약이 탄생하였다. 이 때문에 리스본조약이 발효되더라도 EU는 완전한 정치공동체는 아니다. 하지만 EU는 연방을 지향하는, 법적 실체를 갖춘 공동체로 격상하게 된다.

이러한 EU의 법적 실체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EU의 형성 과정과 용어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1967년에 유럽공동체(EC)가 탄생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ies)와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형성 과정은 “법을 통한 통합(integration through law)”이라고 불릴 수 있으며, 하나의 거대한 정치적 실험이다. 1648년 웨스트팔리아조약 체제 이후 2차 대전에 이르기까지 유럽 국가들은 경쟁 속에서 일정한 세력균형을 이루면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자 노력해왔다. 또한 2차 대전이 끝나고 슈망 선언을 시작으로 유럽 국가들은 공동체 형성을 통해 상호 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노력을 경주해왔다.

유럽공동체는 형성 과정이 매우 복잡하여 명칭을 둘러싸고 종종 오해가 생긴다. 가장 흔히 범하는 오류는 “EEC(유럽경제공동체; European Economic Community), Euratom(유럽원자력공동체;

요한 산업이다. 또한 경제통합으로 EU 내에 제조업의 지역별 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찍이 크루그먼(Krugman) 교수는 1993년에 유럽 통합으로 지역별 산업특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특정산업에 특화되어 있는 지역은 외부충격에 직면할 경우 엄청난 구조조정 비용을 감수해야만 한다. 단일통화를 사용하는 단일시장이 완성되면 EU는 미국과 같은 수준의 지역별 산업특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산업특화가 이루어진 지역은 환율 정책을 쓸 수 없는 상태에서 주력산업이 외부충격에 노출될 경우에 대비해 충분한 조정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는 EU가 최적통화지역(Optimum Currency Area)이 되기 위해서는 산업특화로 인한 비대칭적 충격에도 이겨낼 수 있는 유연한 경제체질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17개국에서 대기업이 제조업 부가가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헝가리, 룩셈부르크, 아일랜드에서는 3분의 2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발틱 국가들과 네덜란드, 키프로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스페인 등 몇몇 남부 회원국들은 대기업이 창출하는 제조업 부가가치가 전체 부가가치의 절반에 못 미친다. 특히 키프로스에서는 대기업의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이 14%에 불과하며, 50명 이하 고용의 중소기업이 제조업 부가가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유일한 국가이다.

독일은 제조업 분야의 최대 무역흑자국

2007년에 EU 27개국은 3조 5,120억 유로의 제품을 수출한 반면, 공산품 수입은 3조 3,600억 유로에 불과했다. 전체 무역의 3분의 2 이상은 EU 회원국 간의 역내 거래가 차지하고 있다. 2007년 역외국과의 공산품 무역에서 EU는 1,070억 유로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예상대로 EU는 2007년에 전기 및 광학 장비 분야에서 큰 폭의 무역적자(678억 유로)를 기록하였으며, 식물, 섬유, 기초금속, 금속가공제품 등의 분야에서도 100억 유로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기계, 수송, 화학제품 분야에서는 각각 500억 유로 이상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였다. 공산품 무역에서 독일은 2,470억 유로의 최대 흑자를 기록한 반면, 영국은 1,160억 유로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한편 몰타는 다른 EU 회원국보다 비회원국에 완성품 수출을 더 많이 하는 유일한 국가이고(역외 수출비중 51%), 슬로바키아와 룩셈부르크는 비회원국에 수출하는 비율이 각각 15% 이하로 가장 낮았다.

산업특화에 걸맞는 충격 흡수 능력이 필요

지금까지 EU의 제조업 현황을 고용, 부가가치, 지역별 특화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EU 제조업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고용과 부가가치 등에서 여전히 20~30%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그리고 ECSC(유럽석탄철강공동체;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가 EC(유럽공동체; European Community)라는 이름의 단일공동체로 합병되었다.”는 것과 “1992년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의해 EU가 창설되면서 EC는 발전적으로 해체되었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상기 세 기구는 각각 별개의 법인격체로 존재하였고, ECSC는 50년간의 한시적 조약이어서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EEA, EFTA 협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부족한 상태이다. 이러한 용어들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EU 통합의 역사와 회원국과 EU 간 정책결정상의 권한배분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우선, 가장 먼저 설립된 최초의 유럽공동체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였다. ECSC는 세계대전 당시 문제가 되었던 독일의 철강과 프랑스의 석탄을 공동 개발하여 유럽의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취지에서 설립되었다. EEC는 1957년 3월 25일 로마에서 유럽경제공동체 설립조약에 의해 Euratom과 함께 1958년 1월 1일에 발족된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를 일컫는다. 각 공동체는 개별적인 집행위와 이사회로 운영되다가, 이에 따른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1967년 통합조약(Merger Treaty)에 의해 하나의 집행위와 이사회로 기관이 통합된다. 즉 3개 조약은 각각 법적 효력을 계속 유지한 상태로 기관 간 통합이 완료되었다는 의미이다.

현재는 법적 실체가 없는 EU

1990년대에 들어와서 괄목할 만한 사건이 일어났다. 바로 EU를 탄생시킨 1992년의 마스트리히트조약과 이를 더욱 심화시킨 1997년 암스테르담조약이다. 이는 2001년 니스조약과 2004년 유럽헌법조약 논의로 발전되었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유럽연합’이라고 불리는 EU는 1992년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의해 탄생되었다. 유럽 통합은 동 조약에 의해 기존의 경제분야 협력 이외에 외교안보, 내무사법 분야로 확대되어 소

위 말하는 ‘3주 체제’를 형성함으로써 EU(European Union)로 통칭된다. 또한 EU 창설조약에 의해 기존의 유럽경제공동체를 지칭하는 EEC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단순히 EC로 개칭되어 기존의 EEC 조약의 명칭도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로 변경된다. 따라서 우리가 통상 EC라고 할 때는 과거의 EEC의 후신이며, 복수로 ECs라고 할 때는 ECSC, Euratom, EC를 합친 공동체를 의미하지만, 기술적으로 ECs라고 표현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EC로 표시하고 있다.

그런데 1993년 EU가 발족된 이후에도 EC라는 명칭이 계속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OECD나 WTO 협상에 참석하는 유럽연합 대표는 EU가 아닌 EC로 참석하며, 非EU 국가들과 FTA 등을 체결할 때도 EC의 이름으로 체결한다. 이렇게 EC라는 명칭이 혼용되고 있는 것은 EU의 정책결정에 대한 EU와 회원국 간의 권한관계와 법인격 문제 때문이다.

EU의 3주 체제		
EU		
ECs	공동외교안보	내무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C - 관세동맹/단일시장 - 농업/무역 - 구조정책 • Euratom • ECSC • 신규 또는 수정된 분야 - EU 시민권 - 교육, 문화 - 범유럽네트워크 - 소비자 보호 - 연구개발 - 환 - 사회정책 - 난민 보호(Asylum) - 이민 정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외교정책 - 협력, 공동입장 등 - 평화유지 - 인권 - 민주주의 - 인도적 원조 • 공동안보정책 - WEU 관련 정책 - 군축 - 유럽안보체제 등 (중장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법당국 간 협력 (민사 및 형사) • 경찰 협력 • 인종차별 철폐 • 마약, 불법무기 무역 금지 • 조직범죄 퇴치 • 테러리즘 방지 • 아동 대상 범죄, 인신매매 퇴치

EU 창설조약으로 외교안보, 내무사법 분야로 유럽 통합이 확대되기는 했지만 이 두 분야의 정책결정은 기존 경제협력 분야의 커뮤니티 시스템과는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다. 기존의 ECs는 ECSC, Euratom, EC라는 3가지 조약에 의거하여 각각의 커뮤니티를 보유하여 자체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 즉, 대외무역, 농업, 석탄철강, 원자력 분야 등에서 회원국이 해당분야의 주권을 공동체에 이양하여 초국가적인 공동체 차원(Community)에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대외적으로 프랑스, 영국 등 개별 국가 이름이 아니라, EC라는 이름으로 협상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외교안보와 내무사법의 경우는 다르다. 초국가적인 공동체 형식(community policies)이 아니라 각 회원국이 해당분야에 주권을 보유하면서 정부 간 협력에 의해 공동의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 간 협력 형식(inter-governmental policies)을 취하고 있다. 결국, EU는 공동체 기관에 의해 초국가적 결정이 이루어지는 ECs와 회원국 정부 간 협력의 형식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외교안보, 내무사법 협력이 공존하는 협력체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로 인해 EU 자체는 법인격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대외적으로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조약을 체결할 경우 법인격이 있는 EC의 이름으로 하게 된다. 하지만 리스본조약이 발효되면 이러한 이중구조는 없어지고 EU는 법인격을 갖춘 실체(juridical personality)로 탄생하게 된다.

EU와 EFTA, EEA의 차이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는 유럽경제공동체에 가입하지 않은 유럽의 7개 국가가 EEC에 대응하기 위해 영국을 중심으로 설립한 자유 무역연합이다. 영국, 오스트리아,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 노르웨이, 포르투갈 등 7개의 국가가 1960년 5월 3일에 결성하였다. 1961년 핀란드가 준가입(1986년 정식 가입)하였고, 1970년 아이슬란드가 가입했

다. 1973년 영국, 덴마크가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하면서 탈퇴했고, 1986년 포르투갈도 EEC에 가입하면서 탈퇴했다. 1991년 리히텐슈타인이 가입했고 1995년에는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가 EU에 가입하면서 탈퇴했다. 그 결과 현재는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 국가가 가입되어 있다. 당시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3개국은 모두 EU에 가입할 만한 정치, 경제적 수준에 도달한 상태여서 EU 가입 협상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당초 EU 집행위원회는 EEA 창설을 통해 기존의 EFTA 국가와 EU를 조화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EEA 협상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이들 3개국은 EU 가입 협상을 통해 EU 회원국이 되었다.

이들 3개국의 EU 가입 신청은 EU의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개혁 논의를 더욱 가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회원국이 점차 늘어나자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프랑스, 독일 등의 강대국은 기존의 만장일치제 대신 가중다수결을 확대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로 인해 다수결제 운영에 대한 회원국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EEA(European Economic Area)는 EFTA 국가들과 EC 일부 지역에 하나의 유럽경제지역을 창설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스위스는 EEA 협정 비준을 거부하여 동 체제에 가입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1992년 5월 2일 공동체 국가들 즉, EEC, ECSC, 그리고 당시 12개 회원국과 5개 EFTA 국가들이 서명해 1994년 1월 1일부로 발효하였다.

EEA 협정은 전문에서 “하나의 동태적이고 동질적인 유럽경제지역(a dynamic and homogeneous European Economic Area)”의 창설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이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공동체 법이 EFTA 국가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EC법과 EEA법이라는 두 개의 법질서가 존재하지만 EEA법은 EC법의 발전에 발맞추어 나가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리스본조약은 한-EU FTA의 비준에도 영향

한국은 지난 7월 EU와의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사실상 타결하고, 현재 서명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명의 경우 한국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만 받으면 되지만, EU는 가서명한 영문 협정문을 23개의 언어로 번역한 뒤 회원국들의 정식 서명 절차에 들어간다. 문제는 그 다음의 비준 절차다. 한국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으면 되지만, EU는 27개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개국 의회의 비준을 받으려면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하지만 리스본조약이 통과돼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발효된다면 회원국 의회로부터 일일이 비준받을 필요 없이 유럽의회의 동의만으로 협정을 비준·발효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아일랜드 국민투표와 리스본조약의 비준은 한-EU FTA를 통한 한국과 EU의 관계 개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한국인에게도 중요한 사안인 셈이다.★

박덕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기침체로 인해 극우 민족주의와 인종차별이 기승

The rise of far-right nationalism and racism during the economic downturn.

Current economic and social difficulties are creating an impetus for rising nationalism and xenophobia. Extremist parties are using the current economic crisis as a political opportunity to gain popularity by taking a far-right stance on issues regarding immigrants and minorities. Unless they can offer an alternative to the current system of democracy and social order, this shift is expected to be no more than a temporary event.

EU 내 민족주의와 인종차별 사례가 증가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EU 내 민족주의와 인종차별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약자, 비주류로 인식되는 소수 인종에 대한 혐오 범죄들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EU 기본인권청(FRA)'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회원국 내 전체 소수민족 및 이민자들 가운데 55%가 인종차별이 확산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¹ 이들은 특히 구직 활동과 주택 구입 및 임대, 은행 계좌 개설 및 대출, 의료보험 가입, 학교, 식당, 상점 출입 시 인종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종별로는 집시 2명당 1명꼴로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이어 남아프리카인 41%, 북아프리카인들의 36%가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답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인종 차별적 범죄를 목격했다고 밝힌 이들 중 전체의 12%에 이르렀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중 82%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인데, 신고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가별로 보면 이탈리아와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북아프리카인들이 가장 많이 인종차별을 경험했으며(각각 94%와 88%),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그리스 내 집시들(78~90%), 이탈리아 내 집시들과 알바니아인들(76~77%)순으로 인종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²

¹ EU 27개국에서 2만 3,500명을 대상으로 직접 면접 조사

² "EU 국가들, 소수민족 인종차별 만연". (2009. 4. 24.). 『연합뉴스』.

경제적 타격을 받은

동유럽 국가들의 상황이 특히 심각

역사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 소수 인종에 대한 혐오 범죄가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실업률이 높아지고 부패가 만연해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을수록 인종범죄는 경제상황 악화와 함께 늘어난다. 그런 면에서 동유럽 국가들은 인종차별 범죄에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분류된다. 이 지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률이 가장 급격히 하락한 신흥국 그룹이기도 하다.³

최근 가장 눈에 띄는 지역은 헝가리다. 헝가리는 지난 11월 IMF로부터 160억 달러 가량의 구제금융을 받았다. 실물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어 실업률이 지난 11년간 최고치인 8%에 이르렀으며, 2009년 경제성장률도 -6.3%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외국자본에 대한 반감과 소수민족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67%가 유대인들이 비즈니스 세계에서 너무 많은 권력을 갖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소수인종 혐오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최근 타타르센트죄르지에서는 집시 가족이 살고 있는 주택에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아버지와 5세 아들이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번

³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률 하락폭: 동유럽(-6.6%p), 남미(-6.0%p), 아시아(-5.5%p), 아프리카(-4.5%p), 중동(-2.1%p)順





방화사건은 소수인종 혐오에서 비롯된 살인일 가능성이 높다. 헝가리 정부는 2008년부터 집시 대상 범죄를 전담하는 특별수사팀을 창설해 살인, 방화, 집단폭행, 협박 등 미제사건 해결에 나섰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 더구나 극우 성향의 요빅(Jobbik)당은 최근 극우단체인 ‘헝가리 수호대(Hungarian Guard)’와 함께 ‘집시 범죄 소탕 운동’까지 시작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불가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동유럽에서도 이와 비슷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서유럽에서도 인종차별 범죄가 증가 추세

소수인종 혐오 범죄는 서유럽 지역으로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아일랜드 수도 벨파스트에서는 인종 차별주의자의 증오 범죄 때문에 루마니아계 집시 117명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루마니아인의 집에 돌이 날아드는 등 최근 각종 위협이 잇따라 놀란 집시들은 인근 교회로 대피했지만 인종주의자들은 교회에까지 돌을 던지며 공격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집시들에게 자녀들을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스웨덴 등에서는 네오 나치 세력이 외국인 범죄를 주도하고 있다. 독일 드레스덴에서는 35명의 네오 나치주의자들이 도시 지하철역에서 아시아 여성을 상대로 인종차별적 행동과 발언을 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네오 나치주의자들은 이날 64년 전 연합군의 독일 드레스덴 대공습을 맞아 열린 행사에서 경찰차를 뒤엎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⁴

경제위기에 편승한 EU 내 극우파 정당

무엇보다도 EU 의회와 각국 지방의회 선거 결과는 우려를 자아내기 충분했다. 외국인 혐오에 편승하여 경기침체를 정치적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우파 정치세력들의 약진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⁵

⁴ “경제위기 헝가리 인종혐오 범죄 기승,” (2009. 2. 26.), 『경향신문』.

⁵ 이와 함께 탈국가화 및 EU의 강화에 대한 반대가 점차 커진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⁶ 토니 블랭크리 (2009. 6. 24.), “목소리 높아지는 유럽 민족주의,” 『세계일보』.

가장 의외의 결과가 나온 곳은 영국이다. 영국의 집권당인 노동당은 15%의 득표율을 기록해 28%의 득표율을 기록한 보수당은 물론 17%를 기록한 독립당(UKIP)에게도 뒤졌다. 영국 독립당이 내건 목표는 EU가 아닌 영국 유권자들만 직접 책임을 지는 영국 의회가 만든 법률에 따라 영국을 통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강경한 우파인 영국 국민당(BNP)의 득표율이 10%에 육박했다는 점이다. 영국 국민당은 EU 의회 의석 2석을 얻는 한편, 지방의회 선거에서는 몇몇 주요 지역에서 승리를 거두기도 했다. 영국 국민당을 파시스트 정당으로 간주할 경우 영국의 파시스트 정당이 최초로 EU 의회에 진출한 셈이다.

그 밖에 네덜란드에서는 이슬람에 반대하는 진보적인 자유당이, 오스트리아에서는 이민에 반대하는 미래연대가, 덴마크에서는 강경 우파인 덴마크 국민당이, 이탈리아에서는 이민에 반대하는 북부동맹이, 핀란드에서는 EU와 이민문제에 회의적인 진정한 핀란드당이 크게 약진했다.⁶ 이러한 극우파 세력들은 EU 의회 내에서도 총 50석, 전체의 7%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의회 내에서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인종차별과 극우파 정당의 약진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전망

경제위기 속에서 이민자들이 자신의 일자리를 빼앗다는 반감과 저소득층 이민자들의 범죄로 인한 치안 불안은 EU 내 소수인종에 대한 범죄와 극우파 정당의 득세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인종차별보다는 실업과 EU 통합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즉, 현재의 사회질서나 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민족주의와 인종차별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증가하는 인종차별 범죄와 민족주의에 대해 향후 EU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종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국제적 위상을 유지하기 위한 EU의 과제

EU's next challenges in maintaining its international stature.

An essay named “Is Europe doomed to fail as a power?” by Charles Grant, the director of the Centre for European Reform, was published in July, 2009. It contains a gloomy view on Europe: he argues that despite the region was “integrating economically, launching its own currency, expanding geographically and passing new treaties that would create stronger institutions,” it no longer seems like a power in the making.

유럽개혁센터의 찰스 그랜트는 「유럽, 권력의 중심에서 멀어지는가?」라는 에세이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저자는 EU가 유럽 지역을 경제적으로 통합하고 자체 통화를 발행하며 지속적으로 지역을 확장하고 새로운 조약을 통과시킴으로써 국가적 번영과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예전처럼 강력한 파워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U는 문화·경제적 힘으로 상징되는 소프트파워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국가와 지역, 집단 간의 이해관계를 조화시키고자 노력해왔다. 또한 국제기구를 통해 EU의 국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여기서 파워 즉, 권력이란 EU가 회원국들과 그들을 둘러싼 여타 국가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EU는 여타 국가들이 자신들의 제도와 완전히 같진 않더라도 정치·경제적으로 EU와 양립하는, 모순이 없는 상태를 추구하고자 한다.

한편 EU는 획기적인 사회, 경제, 정치적 모델을 제시하여 더욱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웃 국가들로부터 EU의 역내 가입을 희망하며 이민가고 싶은 지역이 되고자 한다. 또한 EU는 교토의정서 이후 기후변화(Climate Change)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 침체가 계속되자 유럽 국민들 사이에서 이러한 EU의 움직임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EU 회원국 정부는 붕괴 직전에 놓인 은행들에 대

해 다양한 구제금융을 실시하고, 경기부양 패키지 및 강력한 규제를 통하여 금융시장을 살리고 경제를 회복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 지역의 성장 부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2010년 GDP 성장률은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점점 더 노령화되어가는 인구 구조는 경제 성장을 막는 제약 요인이 될 것이다. 한편 유로화는 이번 금융위기 당시 환율변동성을 낮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유로화의 사용이 유럽의 소프트파워를 유지하는 데 한몫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유로화 도입을 성공이라 단정 지을 수 없는 단계이다.

그렇다면 EU의 하드파워는 어떠한 상황일까? 저자는 EU의 하드파워를 실패라고 평가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EU는 외교안보정책에 있어서 국가 간의 상이한 이해관계로 타협이 어렵고, 특히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북한 등 국제사회의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EU는 러시아와 중국에게 강대국으로서의 파워를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러시아에 대한 태도가 EU 내에서 지역별로 나뉘어 있기 때문이다. EU는 지역적으로 미국, 중국에 이어 3번째로 러시아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특히 독일은 러시아에 대한 수출이 막대하고, 키프로스는 은행 산업이 러시아와 깊이 연관되어 있어, 이들 국가들은 러시아에 상당한 로비 활동을 펼치며 러시아와의 우호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



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고 탄소방출의 저장을 가능케 하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U의 외교안보정책이 더욱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한다. 특히 지도자들은 강력한 리더십이야말로 EU의 분리되고 불안정한 상황을 결집시킬 수 있는 핵심 요소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EU는 고루한 문제들로 여겨질 수 있지만,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금융시장규제, 중동 평화, 러시아 권력의 부활, 불법이주, 테러 등 국제사회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러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자료: Grant, C. (2009). Is Europe doomed to fail as a power? Centre for European Reform.) ★

이지혜 삼성경제연구소 리서치 애널리스트

다. 하지만 여타 국가들은 가스 등 에너지 문제로 러시아와 불편한 상황이다.

한편 중국 또한 유럽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특히 중국은 북한, 티베트 등 관련 국가들의 문제와 환경문제가 얽혀 있다. 하지만 중국은 유럽보다 미국이 진짜 파위를 갖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럽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이다. 또한 유럽의 기후변화에 대한 노력과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해 중국은 유럽이 환경규제를 통해 중국경제를 약화시키려는 속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마도 EU 회원국 모두가 더욱 단합하고 강경한 자세를 취할 때, 러시아 및 중국 등의 다른 패권 국가들로부터 위상에 걸맞는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EU는 왜 안보·외교 정책에서 성공하지 못했을까? 외교·안보 정책은 EU국가들에게 비즈니스 규제나 통화정책보다 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EU 회원국들은 경제적 이슈에 대해서는 집행위원회나 ECB와 같은 강력한 기구를 선호하지만,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EU의 제도가 지나치게 강압적이거나 반대로 너무 자유방임적이기를 바라지 않는다. 또한 유럽은 군사적으로 공동방위체계가 약하다. 즉 어떤 나라는 국가의 방위를 심각하게 고려하는 반면 다른 국가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이처럼 최근 EU가 국제사회에서 권력을 잃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춘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무분별한 지역적 확장, 독일의 역할 변화, 제도·법적인 문제 등이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2004~2007년까지 활발히 진행된 지역적 확장은 EU의 모습을 확연히 바꿔놓았고, 이는 EU의 가장 큰 업적 중의 하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EU는 이를 통해 유럽 지역의 민주주의와 번영을 확산시키는 데 일조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새로 가입한 12개의 국가들은 결속력이 떨어지고 EU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또한 EU가 27개의 국가로 확장되면서 사실상 이슈마다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워지고 신속한 외

교정책의 결정은 더욱 힘들어졌다. 더구나 현재 EU의 지역적 확장에 대해 EU 회원국들 사이의 입장은 상당히 엇갈려 있는 상태이다. 특히 2005년부터 협상 중인 터키,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대한 의견은 국가별로 서로 상이하다.

보고서는 이처럼 EU의 파위가 약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EU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방안은 리스본조약의 외교정책조항에 따라 EU 회원국이 번갈아 맡던 순회의장국제도를 폐지하고 상임의장인 EU 대통령 자리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EU 역외 국가들의 EU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할 것이라 예상된다. 한편 EU의 지리적 확장은 당분간 느린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EU는 인접 국가들과의 정치적 접촉을 더욱 확고히 하며 자유로운 비자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더불어 EU 정책에 대한 참여기회의 확대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 27개국 차원의 공동방위 신설을 멈춰야 할 것이다. ESDP(European Security and Defense Policy)는 모든 회원국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지만, 실제 군대의 활용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강력한 전략적 훈련 체계를 갖고 있는 국가의 경우 개별적이고 독자적인 조직구성을 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EU의 외교 정책에 있어서 하나의 특별한 이슈에 대해 27개 회원국 모두가 일일이 대응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따라서 EU는 각각의 이슈마다 정책을 가장 잘 펼칠 수 있는 소그룹을 구성하여 대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유럽의 소프트파워는 성공적인 경제상황을 기반으로 한다. EU는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형성하기 위하여 혁신, 경쟁, 서비스 탈규제화, 고등교육 등을 증진시키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유로존의 확장을 통해 장기 안정을 구축하고 지금보다 더욱 효율적인 경제개혁을 실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공동의 에너지 정책을 만드는 일 또한 시급하다. EU 단일 시장에 공동의 에너지 시장을 형성한다면, 파이프라인(Pipeline) 네트워크를 통해 더욱 다양한 가스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며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게

유럽지역 경제회복을 위한 정부재정의 중요성

Urgency to rebalance the government budget in Europe.

Rebalancing the government budget is going to be the key element in recovering the Euro economy. The European Commission released its 2009 report on public finances in the EMU. Its 10th report focuses on the impact of the current financial crisis, which spread from the United States, and on possible measures that can be taken to revive the EU economy. It reviews the effects of the coordinated EU stimulus packages and emphasizes that the exit strategy of the government intervention must be carefully designed and implemented in order to control the level of public debt.

집행위원회는 「2009 EMU의 정부재정」이라는 보고서를 발행했다. 2000년부터 열 번째로 발간된 이번 보고서는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심각한 금융·경제 위기에 놓인 EU의 경제위기 극복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EU의 정부 재정 및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U의 정부재정은 위기극복을 위해 (1) 수요 급감을 막기 위한 경기부양책과 자동안정화장치의 역할, (2) 금융시장의 건전성 회복 및 중개역할 복구 지원, (3) 지속적인 예산지원 보장을 통해 장기 성장에 기여하는 등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EU는 유럽경제회복 프로그램(EERP)을 통해 활발한 경제구조개혁과 정부 재정 및 정책으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틀을 마련하였다. 유럽 국가들은 이번 위기가 단기적으로 소비자 수요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공동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에 공동대응책을 실행하게 되었다. 2008년 11월 공식적으로 실행된 EERP의 첫 번째 방안은 소비자의 수요를 증진시키고 신용을 회복시켜 구매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GDP의 1.5%에 달하는(2,000억 유로) 재정을 즉각 투입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경제의 회복 및 탄력성을 증진시키며, 유럽의 장기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리스본전략에 기반을 둔 구조개혁의 시행이다.

한편 최근 EU 회원국들의 공공부채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EU의 평균 재정적자는 2007년 GDP의 0.8%에 비해 2008년 2.3%까지 상승하였으며, 2010년에는 GDP의 5%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침체된 경제에 대한 재정지원과 부실은행에 대한 직접적

인 공적개입의 결과로 해석된다.

지금까지 EU 회원국들은 금융위기 이후 부실해진 금융부문에 대해 막대한 지원을 해왔다. 과거 1970년대 이래 발생한 122개 금융위기로부터 뽑아낸 49개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은행시스템을 회복시키기 위한 재정 지출은 평균적으로 GDP의 13%에 달했으며, 몇몇 이머징마켓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무려 GDP의 50%가 넘었다. 오늘날의 금융시장은 높은 레버리지 비율의 복잡한 금융 상품들로 인해 예전보다 관리가 더 어렵기 때문에 과거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지불했던 비용보다 더 큰 규모의 재정 지출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투입 규모에 비해 회복 비율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재정 지출 비용을 줄이면서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려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신속히 실행되어야 하며, 투명하고 폭넓은 정치적 지지와 탄탄한 법적 틀, 공평한 시장참여와 명확한 출구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 입법·사법 시스템의 질적 수준이 높고, 강력하고 효율적인 정부일수록 재정 지출 대비 회복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보고서는 EU 경기조절 예산의 균형을 판단하고 정부재정의 질적 측면을 평가하며, 회원국 재정구조의 발달과정을 살펴 보면서 오늘날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재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호경기와 불경기 중 주택가격과 정부재정의 관계를 연구하여 재정정책의 역할을 제시하고 이와 더불어 27개국의 재정정책 발달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09. 5.). Public Finances in EMU 2009.) ★

이지혜 삼성경제연구소 리서치 애널리스트

위기 이후 세계경제: 유럽의 경제회복 여부가 관건

Europe in the post crisis global economy: will it lead or lag the world recovery?

Chatham house, a world-leading think tank, released a paper, “Not out of the Woods Yet, Europe now the Key Risk?”. The authors analysed Europe’s relative future position vis-à-vis America and Asia in the aftermath of the current economic crisis and presented a forecast on the world economy.

영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채텀하우스(Chatham House)는 「위기 이후 세계경제: 아직 어려운 고비를 넘기지 못한 유럽이 핵심위험지역」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금융위기 이후 유럽을 포함한 미국, 중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의 2009년 상반기 경제 동향 및 하반기 전망을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세계경제는 산업생산 위축과 금융시장 변동성의 리스크가 완화되는 등 회복의 신호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지만, 유럽은 여전히 불안요소가 상존해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유럽 경제는 현재 금융위기와 실물경기의 침체가 상호 작용하는 피드백 효과(Feedback Effects)로 인해 민간 부문이 주도하는 경제 회복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태다. 유럽 신흥국(Emerging Europe)은 IMF의 원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발틱(Baltic) 국가들과 우크라이나는 2009년 1/4분기에 GDP가 10~20% 감소했다. 2009년 유로존은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경제의 회복과 금융 불안 요인이 해소되지 않는 한 경기부진이 2010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EU 국가들의 급격한 수출 감소(독일)와 건설부문의 가파른 투자 감소(스페인)는 경기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나 공공부문 투자를 위한 공적자금이 부족한 상태이며, 국가별 재정적자 규모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동유럽과 아일랜드는 심각한 금융위기로 IMF와 ECB의 공조에 의존하고 있으며, 서유럽은 행동도 이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유럽의 국경 간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및 복잡성에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반면 미국은 소매판매, 수입, 산업생산 등이 조금씩 안

정을 찾고 개선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 이후 급락했던 주식시장과 소비자 신용이 회복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아직은 미약하나 무역 및 상품 지수가 하강 기조를 멈추고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였다. 기업 수요도 증가하여 수입과 산업생산 데이터가 안정 국면에 진입하였다. 소매판매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택시장은 거래량은 증가하나 가격은 여전히 하락하는 혼란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일자리 수 감소세는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산업 구조조정에 의한 충격이 남아 있어 실업률이 2011년까지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국은 수출 급감에도 불구하고 내수시장의 활성화로 플러스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9년 3~5월 기간 동안 중국의 자동차 판매 대수(1.1백만 대)는新高점을 달성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및 통화 정책 패키지, 2009년 1/4분기 인도의 높은 GDP 성장률,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세계경제에 대해 낙관적인 전문가들은 2009년 하반기부터 세계경제의 ‘U’ 자형 회복을 주장한 데 반해, 비관론자들은 2010년까지 GDP의 추가적인 하락과 지속적인 침체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Post-crisis’란 세계경제의 위기가 완전히 끝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불안정하고 많은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경제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다. (자료: Chatham House (2009. 7.). Towards a Post-Crisis Global Economy: Not out of the Woods yet, Europe now the Key Risk?) ★

이지혜 삼성경제연구소 리서치 애널리스트



제2회 국회 브뤼셀 포럼 The second Parliament Brussels Forum.

The Yonsei-SERI EU centre held its second Parliament Brussels Forum under the banner of "EU's climate change policies and environmental regulations" on the 1st of September. This European Commission-sponsored event was held in the Parliament's VIP dining room and the director Lee of the Business Service Centre for Global Environmental Regulation of The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KITECH) gave a thorough briefing on the challenges that the Korean firms face in entering the European market and it was followed by a Q&A session. The participants discussed various issues including future obstacles as well as opportunities that the EU's climate change policies and environmental regulations present and the Korean government's possible role in helping improve the adaptability of firms.

지난 9월 1일 연세-SERI EU센터는「EU의 기후변화 정책과 환경규제」라는 주제로 제2차 국회 브뤼셀 포럼을 개최하였다. 국회 본관 귀빈식당 별실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의 이귀호 실장의 강연과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다. 이번 포럼에는 포럼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 및 한-유럽 의원협의회 임원진, 주한 EU 대표부의 우베 비센바흐 부대사와 프랑스 상공회의소 이준 필립 회장 등 총 25명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포럼을 통하여 EU 기후변화정책과 환경규제가 향후 한국 경제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핵심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